

언론중재위원회 교육 교재



#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 어떻게 해결할까요?

##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

### 어떻게 해결할까요?

인 쇄 일 2020년 4월 24일

발 행 일 2020년 4월 29일

발 행 처 언론중재위원회

디자인·인쇄 (주)타라그래픽스

언론중재위원회 교육 교재



#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 어떻게 해결할까요?

언론중재위원회 교육 교재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

어떻게 해결할까요?

# CONTENTS

---

# 1

## 언론분쟁의 종류

---

<b>1 명예훼손</b>	06
1. 피해자 특정	
2. 구체적 사실의 적시	
3. 사회적 평가의 저하	
<b>2 재산권 침해</b>	11
<b>3 초상권 침해</b>	12
<b>4 사생활 침해</b>	14
<b>5 음성권 침해</b>	15
<b>6 성명권 침해</b>	16

---



# 2

## 언론분쟁의 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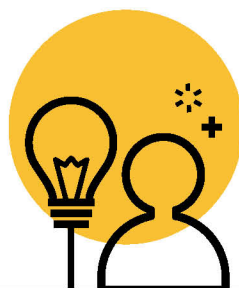
<b>1 언론중재위원회</b>	19
1. 언론분쟁의 조정·중재	
2. 시정권고	
3. 불공정 선거기사 심의	
4. 언론피해구제 상담	
5. 언론중재아카데미	
<b>2 언론조정·중재제도의 장점</b>	23
<b>3 언론조정 절차</b>	25
1. 언론조정	
2. 대상매체	
3. 잘못된 보도의 종류	
4. 청구권의 종류	
5. 신청기간	
6. 신청방법	
7. 조정신청 처리절차	
8. 조정신청 처리결과와 효력	

<b>4 언론중재 절차</b>	37
1. 언론중재	
2. 중재결정의 효력	
<b>5 기타 피해구제방법</b>	41
1. 민사소송	
2. 금지청구	
3. 방해배제청구	
4. 형사적 피해구제	

# 3

## 언론분쟁의 예방

<b>1 위법성 조각(면책)사유</b>	46
<b>2 공인 관련 보도</b>	51
<b>3 초상권 보호</b>	53
<b>4 사생활 보호</b>	56
<b>5 음성권 보호</b>	57



## 제1장

# 언론분쟁의 종류

- 1 명예훼손
- 2 재산권 침해
- 3 초상권 침해
- 4 사생활 침해
- 5 음성권 침해
- 6 성명권 침해

## 1

## 명예훼손

명예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해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말하며, 이와 같은 명예, 즉 개인에 대한 사회의 객관적인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가 명예훼손입니다. 언론보도에 지칭된 사람이 누구인지 주변 사람들이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구체적인 사실이 적시되었다면 그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합니다.

### 1. 피해자 특정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려면, 보도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피해자 특정'이라고 합니다. 당사자의 실명을 명시한 경우뿐만 아니라, 성씨나 이니셜(P군, Y양), 가명을 사용한 경우라도 보도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사에 첨부된 사진이나 방송 뉴스화면에 의해서도 특정될 수 있습니다.



#### 사례

이 사건 보도에서 원고를 'A의 지도교수'라고 지칭하면서 실명, 소속 단과대학이나 얼굴을 공개하지는 않았으나, 원고를 고소한 A의 실명, 얼굴을 공개한 점, B대학교 학위수여식에 참석한 A의 모습이 보도되어 해당 대학교가 B대학교임이 확인되는 점, 비슷한 시기 타 언론사들의 보도에서 'B대학교 ○○과 학생 이○혜(가명)' 등으로 원고의 소속 단과대학을 특정한 바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보도가 원고에 관한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정도에 해당한다.<sup>01</sup>

0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12. 5. 선고 2018가합32463 판결

## 사례

이 사건 기사는 원고를 '현직 해군법무관', '법무관 A씨(○○)'라고 표현하여 원고의 직업과 성, 나이를 특정하고 있는 점, 해군법무관의 규모에 비추어 해군법무관 중 나이가 ○○세로서 A씨 성을 가진 사람은 극히 소수일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적어도 원고의 지인·주변인이란 이 사건 기사가 원고에 관한 것임을 어렵지 않게 인식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므로 피해자가 원고로 특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sup>02</sup>

## 사례

이 사건 보도에서 원고의 전남 모 지역 소재 공장의 외관이 일부분만 모자이크 처리된 채 그대로 나타난 점, 제품의 일부분이 모자이크 처리되기는 하였으나, 그 겉포장 박스와 내용물이 들어있는 비닐포장의 전체적인 디자인과 색상이 그대로 노출된 점, 이 사건 보도 이후 해당 제품명을 키워드로 하여 이 사건 보도를 링크한 블로그 글들도 게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동종업계나 주변인 또는 해당 제품을 접해 본 사람이라면 이 사건 보도가 원고가 제조·판매하는 제품에 관한 것임을 어렵지 않게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보도의 대상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sup>03</sup>

그러나 피해자가 자신에 대한 보도임을 주장한다 하더라도 객관적인 정황을 보아 주변 사람들이 피해자를 알아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피해자 특징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사례

해당 기사에서는 원고의 실명을 명시하지 않은 채 이니셜로 치칭하고, '주한미군 고위인사, 주한미군 정보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A씨, 50대 후반 유부남인 A씨는 한국에서 근무한지 10년이 넘는 미군으로 미국인 부인과 함께 한국에 머물고 있다'는 정보를 적시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원고의 지인이나 주변인 등도 기사 속의 인물이 원고라는 것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해당 기사의 인물이 원고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sup>04</sup>

## ※ 집단표시에 의한 피해자 특정

'서울시민', '경기도민'과 같은 집단표시에 의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집단 규모가 너무 커지면 각 개인에 대한 비난 정도는 희석되므로 구성원 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sup>02</sup>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17. 선고 2017가합546519 판결

<sup>03</sup>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2. 21. 선고 2017가합163 판결

<sup>04</sup>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12. 18. 선고 2017가단233620 판결

## 사례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고소한 여성 아나운서는 154명이고, △△△△△연합회에 등록된 여성 아나운서의 수는 295명에 이르며, 피고인의 발언 대상인 '여성 아나운서'라는 집단은 직업과 성별로만 분류된 집단의 명칭으로서 그 중에는 이 사건 고소인들이 속한 공중파 방송 아나운서들로 구성된 △△△△△연합회에 등록된 사람뿐만 아니라 유선방송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밖의 다양한 형태로 활동하는 여성 아나운서들이 존재하므로 '여성 아나운서'라는 집단 자체의 경계가 불분명하고 그 조직화 및 결속력의 정도 또한 견고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발언은 여성 아나운서 일반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그 개별구성원인 피해자들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피해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않았다.<sup>05</sup>

다만, 예외적으로 구성원 수가 적거나, 주변 정황으로 보아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보도라고 볼 수 있을 때에는 개별 구성원이 피해자로 특정된다고 보기도 합니다.

## 사례

A경찰서는 300명가량의 소속 경찰관이 근무하고 있고, 10개 과로 구성돼 있으며, 그 중 B수사과는 그 구성원 수가 제한적이며 범위가 명확하다. B수사과 중에서도 원고가 속한 C팀에서 이 사건 수사를 담당하고 있다는 점은 주변인들이나 관심 있는 이들이라면 기사를 보고서도 충분히 알 수 있다고 보이며, 일부 모자이크 처리가 돼 있지만 원고의 모습이 포함돼 있는 점에 비추어 원고가 특정됐다고 볼 수 있다.<sup>06</sup>

## ※ 판례에서의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 인정 여부

## 인정된 사례

- 국방부 검찰단 (39명)
- 3·19동지회 교사들 (37명)
- 독도경비대 (37명)
- 대전 지역 검사들 (31명)
- 계룡대 해군 법무장교 (25명)
- 충북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 (21명)
- 모 아파트 동대표 (19명)
- 검찰특별수사본부 검사 (10명)
- 기무사 현역 장성들 (8명)

## 인정되지 않은 사례

- 파업 중인 MBC 노조원 (140명)
- 육군 검찰 (170명)
- 여성 아나운서 (295명)
- 법성포 굴비업체 (400개)
- 안성시 공무원들
- 국정원 직원
- 5·18 민주유공자 (7,056명)
- 노사모 회원
- 독립운동가

<sup>05</sup>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도15631 판결

<sup>06</sup>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12. 선고 2016가단5246346 판결

## 2. 구체적 사실의 적시

언론보도에 당사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이 포함된 경우 당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됩니다.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표현 없이 순수한 의견이나 논평일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잘못된 사실을 근거로 의견이나 논평을 할 경우에는 명예훼손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례

피고는 '대학병원 의료원 소속 간호사로 전국보건의료산업 노조위원장으로 활동하였던 원고가 당해 의료원과 업무에 복귀하지 않는 조건으로 임금을 지급받기로 비밀리에 협약을 맺었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시하면서, '검은 거래', '이면합의'와 같은 표현을 사용했으나, 이는 위와 같은 원고의 행위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 내지 의견표명에 해당할 뿐, 이 사건 기사 내용이 중요한 부분에서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sup>07</sup>

### 사례

피고는 '땀의 관리 및 위기 대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는 땀을 관리하는 수력발전소 직원들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는 취지의 보도를 하면서, '총체적 부실', '엉망'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으나, 이는 해당 사건에 대한 사실을 근거로 정당하게 도출된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sup>08</sup>

### 사례

'중복', '주사파' 등의 표현은 시대적, 정치적 상황에 따라 그 용어 자체가 갖는 개념과 포함하는 범위가 변하기 때문에 그 의미를 객관적으로 확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에서 해당 표현은 A당(정당)의 운영이나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경선 과정을 둘러싸고 원고들이 취한 정치적 행보나 태도를 비판하기 위한 수사학적 과장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는 사실 적시가 아니라 의견 표명으로 볼 여지가 있다.<sup>09</sup>

한편, 사실관계가 전제되지 않은 단순 의견표명이라도 한계를 넘어서 '모욕적이고 인신공격'에 해당하는 과도한 표현을 사용했다면 명예훼손과는 별도의 불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 사례

피고와 원고가 기본적으로 역사관 및 정치적 견해를 달리하고 있고, 이념적 대립이 극심한 대한민국의 현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해당 칼럼에서 사용한 '김일성 찬양론자로 머리가 돌아버린 공화국 영웅' 등의 표현들은 지나치게 모멸적이고 인신공격적이다. 이는 언론의 의견표명으로서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sup>10</sup>

<sup>07</sup> 서울고등법원 2018. 6. 1. 선고 2018나2010324 판결

<sup>08</sup>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0. 25. 선고 2017가합111394 판결

<sup>09</sup>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판결

<sup>10</sup>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28. 선고 2016가합506507 판결

### 3. 사회적 평가의 저하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을 보도한 경우 당사자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일을 저질렀다거나, 직업이나 직무에 관하여 해를 줄 수 있는 내용, 범죄 행위 등은 모두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사례

모 신문이 프로골프 선수의 영어 인터뷰 내용을 인용하면서 해당 선수가 "한국에서의 우승은 나를 싫어하는 한국에 대한 복수라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는 '반감을 해소하는 계기'라는 뜻의 'vindication'을 합리직 근거 없이 '복수'로 잘못 번역한 것으로, 원고가 한국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켜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고 보아 명예훼손을 인정했다.<sup>11</sup>

#### 사례

교사인 원고가 남성 혐오 커뮤니티 회원으로, 편향된 교육을 하고 '한남충'이라는 표현도 사용하는 등 남학생들에 대한 차별을 하였다는 이 사건 기사 내용은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sup>12</sup>

<sup>11</sup>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3. 4. 선고 2009가합25116 판결

<sup>12</sup>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26. 선고 2017가합566094 판결



## 2

## 재산권 침해

재산권은 경제적 가치를 가진 권리, 즉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입니다. 잘못된 보도로 인해 개인이나 회사 등의 매출 감소와 같은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면 재산권 침해가 됩니다.

판례는 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잘못된 보도와 매출액 감소 등의 재산상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원고가 입증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법원에서 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직접적으로 인정하는 사례는 드문 편이며, 위자료를 산정할 때 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 발생 여부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 사례

피고는 이 사건 기사가 기사의 형식을 차용한 기사형 광고임에도, 광고라는 문구를 기재하지 않아 광고와 기사의 구분의무(신문법 제6조 제3항)를 위반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기사를 통해 광고 속 업체가 신뢰할 만한지를 확인하였다고 보인다. 해당 업체는 애초부터 사기범행을 기획하면서 피고에게 기사 게재를 부탁하였고, 6천만 원 정도에 불과하던 주문이 기사가 게재된 이후 약 10억 원으로 치솟은 사정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의 기사형 광고와 광고에 따른 독자의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언론사는 독자의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sup>13</sup>

<sup>13</sup>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5다210231 판결

## 3

## 초상권 침해

초상권은 사람이 자신의 초상, 즉 얼굴을 포함한 신체적 특징에 대하여 갖는 인격적·재산적 이익입니다. 즉, 사람이 자기의 얼굴이나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되거나 공표되지 않고, 광고 등에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할 권리입니다.

언론보도에서 본인의 동의 없이 본인임을 알 수 있는 사진 등이 게재되거나 방송될 경우 초상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의 동의를 얻어 초상이 공표되었더라도 동의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나, 본인이 공표한 초상이라도 본인의 공표 의도와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초상권 침해가 성립합니다.



### 사례

모 인터넷신문이 영화 홍보를 위해 한국에 방문한 해외 스타와 함께 사진을 찍고 있는 신청인의 사진을 동의 없이 촬영하여 보도했다. 사인(私人)인 신청인의 사진을 동의 없이 보도하여 초상권이 침해되었음이 인정되어 손해배상이 이뤄졌다.<sup>14</sup>

<sup>14</sup> 2013서울지정592 손해배상청구

## 사례

모 인터넷신문이 연예인 관련 보도를 하면서 동명이인인 일반인의 SNS 계정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면서 '보조개 미녀' 등의 표현을 사용하였다. 언론사는 실수임을 인정하고 조정대상보도의 열람·검색을 이미 차단했다며 유감을 표명했고,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sup>15</sup>

그러나 시위 현장 취재 등 공익성이 있는 보도에서 의도하지 않게 초상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언론사의 책임이 없습니다.

## 사례

원고의 사진이 게재된 기사는 당시 전 국민적 관심사인 '광우병 촛불집회' 시위 현장이었으므로 공공성이 인정되고, 원고의 모습은 이러한 현장을 촬영하는 중 우연히 포함된 것이지 의도적으로 촬영한 것은 아닌 점, 원고 스스로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현장에 있었으므로 언론에 촬영될 수도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는 예견할 수 있었던 점, 원고의 사진이 원고의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위법성이 조각된다.<sup>16</sup>

## 사례

모 인터넷신문이 보수단체가 광복절에 개최한 대통령 탄핵집회에 여성우월주의 성향인 인터넷 커뮤니티 회원들이 동침했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신청인의 뒷모습이 촬영된 사진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신청인의 행위는 그 자체가 이미 공공장소에서의 집회에 참가한 것에 해당하고, 뒷모습만으로는 이 사건 기사 속 사진에 노출된 사람이 신청인임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초상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sup>17</sup>

<sup>15</sup> 2018서울조정2335 손해배상청구

<sup>16</sup>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1. 25. 선고 2009가단300209 판결

<sup>17</sup> 2018서울조정1618 손해배상청구

## 4

## 사생활 침해

흔히 프라이버시라고 하는 사생활의 비밀이란, 자신의 사생활 내지는 사적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생활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공개당하지 않을 권리입니다.

### 사례

주한미군의 불륜관계에 대한 보도는 사적 영역에 관한 사항으로, 그러한 기사내용 및 정보가 국민들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보도에 의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권·사생활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sup>18</sup>

### 사례

피고는 방송 프로그램에서 지방번호사회 감사 후보자가 폭언 및 폭행을 한 사실을 보도했고, 이에 대해 원고는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해당 방송이 지방번호사회 감사 선출 과정의 문제점을 비판하려는 공익성이 인정되고, 피고 소속 기자들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폭언 및 폭행 사건에 관한 정보를 취득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기 때문에 이 사건 방송 내용이 두텁게 보호돼야 할 내밀한 영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sup>19</sup>

또한, 취재과정에서 당사자의 동의 없이 개인이 생활하는 공간 또는 영업 공간에 침입하는 것 역시 사생활 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 사례

피고는 과거 북한 공무원이었던 원고가 재판에서 비공개 증언을 한 사실 및 이로 인해 원고의 딸이 북한 보위부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원고는 이 기사로 인해 북한에 있는 자녀의 생명이 위험하게 됐다며 피고를 상대로 사생활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보도가 공익성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는 등 원고 및 가족의 생명, 신체 등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사생활 침해를 인정하였다.<sup>20</sup>

<sup>18</sup>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12. 18. 선고 2017가단233620 판결

<sup>19</sup>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4. 7. 선고 2015가단5023195 판결

<sup>20</sup>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12. 선고 2015가단5072685 판결

## 5

## 음성권 침해

음성권이란 자신의 목소리에 대한 권리입니다. 기자 또는 제3자가 동의 없이 타인의 음성을 비밀로 녹음해 이를 언론을 통해 공개하는 행위는 음성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 사례

피고는 문건 폭로에 따른 도청의혹 사건의 전말을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원고와의 통화를 녹음한 것을 바탕으로 기사를 작성해 보도하였다. 이에 원고는 사전 동의 없이 통화 내용을 보도한 피고에 대해 음성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재판부는 보도가 공익을 목적으로 할지라도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는 통화내용의 보도를 하면서 원고가 입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음성권 침해를 인정하였다.<sup>21</sup>

## 사례

공무원들이 실리콘 손가락을 이용해 허위 초과근무시간을 등록한다는 보도를 하면서 이와 무관한 실리콘 보형물 제조업자인 신청인의 음성을 동의 없이 보도해 음성권을 침해했다.<sup>22</sup>

<sup>21</sup>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6. 선고 2017가합548478 판결

<sup>22</sup> 2015서울조정2237 손해배상청구

## 6

## 성명권 침해

언론보도에서 익명처리를 해야 하는 부분을 실명으로 보도하는 경우 성명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공인이 아닌 한, 개인의 성명을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고 사용해야 합니다.



## 사례

원고들이 교회의 장로이기는 하나 널리 알려진 공인이라고 할 수 없고, 원고들에 대해 이뤄진 징계가 사회적으로 고도의 해악성을 가진 중범적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교회 장로들의 실명과 징계 내용을 그대로 적시해 보도한 것은 성명권 침해에 해당한다.<sup>23</sup>

## 사례

인터넷 게시판에 이종격투기 선수에 대한 악성댓글을 게시한 신청인의 실명이 기사에 그대로 공개돼 성명권이 침해됐다.<sup>24</sup>

<sup>23</sup>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6. 15. 선고 2016가단250681 판결

<sup>24</sup> 2014서울조정7206 손해배상청구

## 제2장

# 언론분쟁의 해결

- 1 언론중재위원회
- 2 언론조정 · 중재제도의 장점
- 3 언론조정 절차
- 4 언론중재 절차
- 5 기타 피해구제방법

##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 해결절차





## 1

## 언론중재 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중재위)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을 조정·중재하고, 보도에 의한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립된 준사법적 기관입니다.

서울에 8개, 지역에 10개의 중재부가 있으며, 각 중재부는 현직 부장판사, 변호사, 10년 이상 경력의 전직 언론인, 언론학 또는 법학 교수 등 5명의 중재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 언론중재위원회 주요 업무

언론분쟁의 조정 및 중재	시정권고	불공정 선거기사 심의
언론 등(방송, 신문, 잡지, 뉴스통신, 인터넷 신문, 인터넷 포털, IPTV)의 보도 또는 매개로 피해 발생시 정정·반론·추후보도청구, 손해배상청구의 분쟁을 조정·중재합니다.	언론의 보도를 심의하여 기사의 내용이 개인적·사회적·국가적 법익을 침해한 다고 판단되면 해당 언론사에 시정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의해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신문, 잡지, 뉴스통신의 불공정한 선거보도에 대해 사과문, 정정·반론보도문, 경고결정문·주의사실 게재 또는 경고·주의 등의 결정을 내립니다.

## 1. 언론분쟁의 조정·중재

중재위는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가 정정·반론·추후보도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조정·중재를 통해 분쟁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2. 시정권고

중재위는 언론보도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언론사에 서면으로 시정을 권고합니다. 시정권고는 권고적 효력을 가지며 강제적 효력은 없습니다.

## 3. 불공정 선거기사 심의

중재위는 공직선거법에 의거해 각종 선거가 실시될 때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합니다. 선거기사의 공정성 여부에 대해 자체 심의하거나 후보자가 시정요구한 선거기사를 심의하여 불공정한 보도인 경우 사과문, 경고 결정문, 정정·반론보도문, 주의사실 게재 또는 주의 등의 결정을 내립니다. 또한 선거기사로 인해 피해를 입은 후보자나 정당의 반론보도청구를 언론사가 거부하여 그 청구가 위원회에 회부된 경우, 48시간 이내에 이를 처리합니다.

## 4. 언론피해구제 상담

중재위의 전문 상담원은 잘못된 언론보도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조정·중재신청과 법적절차를 포함한 종합적 피해구제 방안을 무료로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 상담전화 02-397-3000

언론보도 등으로 인한 피해자는 중재위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나 우편, 이메일(counsel@pac.or.kr)을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온라인 실시간 상담'도 가능합니다.

## 5. 언론중재아카데미

중재위는 언론중재아카데미를 설치하여 언론피해구제 및 예방교육과 전문연수 프로그램 등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편리하게 교육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가. 언론피해구제 및 예방교육

- 언론사, 대학, 기업,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의 구제와 예방을 위한 교육을 제공합니다.
- 언론법제 및 언론피해 구제 실무 전문가들로 구성된 강사진은 다양한 언론조정·중재사례 및 법원 판례 등을 소개하고, 언론보도와 인격권 및 언론조정·중재제도 등을 교육합니다.

### 나. 전문연수 프로그램

- 사회 각 분야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전문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전문연수 프로그램은 그 수요 및 대상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며, 공무원 연수, 법조인 연수, 언론인 연수, 대학생 연수, 기관위탁 연수 등을 진행합니다.

### 다. 청소년 언론중재스쿨

-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에 대한 법적 소양을 쌓을 수 있도록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언론중재스쿨을 운영합니다.
- 청소년 언론중재스쿨은 인격권과 언론조정·중재제도에 대한 강의뿐만 아니라 언론사 견학, 모의조정 체험, 설득 및 대화기법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 교육신청

- 전화 02-397-3062~7
- 이메일 edu@pac.or.kr
- 홈페이지 <http://www.pac.or.kr>

## 2

## 언론조정·중재제도의 장점

### 조정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와 언론사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중재부가 객관적, 중립적 입장에서 양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당사자 간 합의를 이끌어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 중재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와 언론사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중재부의 결정에 따라 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중재신청을 하려면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중재부의 중재결정에 따르기로 하는 합의가 있어야 하고, 이런 합의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 1. 신속 · 무비용



언론조정·중재제도는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 ADR)<sup>25</sup>로서 복잡한 재판절차와 비교하여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언론 관련 분쟁을 비용 없이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흔히 소송의 단점으로 비용(expense), 지연(delay), 스트레스(stress)를 지적합니다.<sup>26</sup> 법원의 재판은 짧게는 몇 개월에서 몇 년이라는 시간과 경제적 비용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전부 아니면 전부' 식의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절차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겪는 스트레스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ADR의 일종인 언론조정·중재제도는 14일 이내에, 중재부가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직권조정결정)을 내릴 때에는 21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sup>25</sup> 소송에 의한 재판 이외의 방법으로 각종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을 말하며, 협상·일선·조정·중재 등이 있습니다.

<sup>26</sup> Warren Burger, 미국 15대 연방대법원장, 1982

신속하게 비용 없이, 당사자 간 타협과 조정을 통해 언론분쟁을 해결하기 때문에 소송으로 인한 스트레스나 과도한 경제적, 시간적 부담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 2. 피해 확산 방지

언론보도는 그 자체의 전파력도 뛰어나지만, 인터넷 포털 등을 통해 급속도로 확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정확한 기사가 게재될 경우 당사자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을 수 있는데, 언론조정·중재 제도는 신속한 절차를 통해 피해를 구제함으로써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3. 만족감 높은 다양한 결론 도출

중재위는 소송 이전 단계에서 양 당사자가 서로 절충할 기회를 갖고 양보와 타협을 통해 좀 더 만족스러운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언론조정절차는 법원의 현직 부장판사, 변호사 등 법조인뿐만 아니라 언론 관련 전문가들이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다양한 형태의 합의<sup>27</sup>를 도출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직권조정결정)을 내립니다. 당사자 간 합의가 성립하거나 조정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한편, 당사자 쌍방이 중재부의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중재결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합니다. 이렇게 언론조정·중재제도를 이용하게 되면 짧은 시간 안에 법원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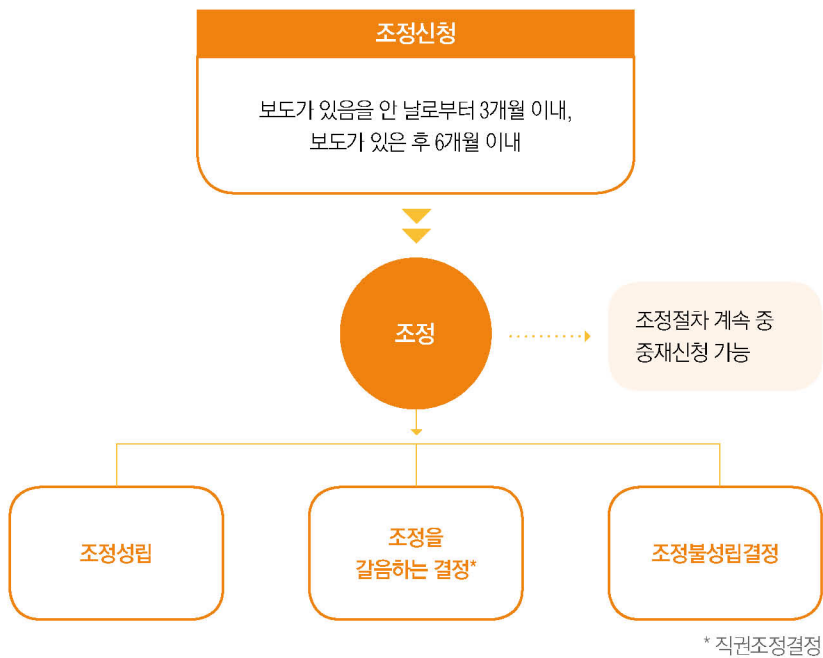
## 4. 간편한 절차, 프라이버시 보호

재판은 일반에 공개되어 진행되는 반면, 언론조정·중재 절차는 당사자들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또한 절차가 엄격하지 않아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 없이 당사자가 자유롭게 자기주장을 펼치면서 권리회복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언론조정·중재제도를 이용하여 언론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편익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sup>27</sup> 손해배상, 정정·반론·추후보도 외 기사 열람·검색 차단, 후속보도, 해명기사, 유감표명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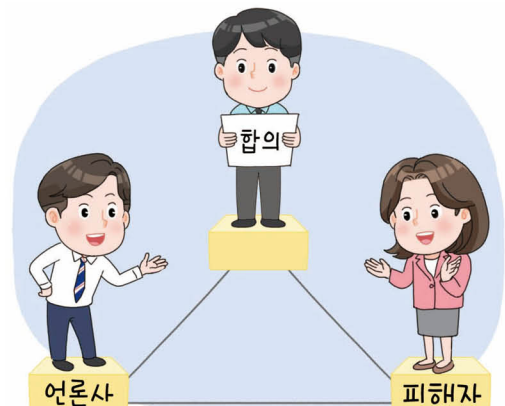
## 3

## 언론조정 절차



### 1. 언론조정

언론조정이란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와 언론사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중재위가 객관적, 중립적 입장에서 양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당사자 간 합의를 이끌어 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 2. 대상매체

- 방송, 신문, 잡지, 뉴스통신
- 인터넷 신문, 인터넷 뉴스서비스(인터넷 포털), 인터넷 멀티미디어방송(IPTV)(이하 언론사 등)

### 사례

모 인터넷신문은 주차 공간 때문에 생긴 이웃 간의 갈등을 조명하는 기사에서 신청인들과 이웃 주민의 대화내용이 담긴 음성파일을 게재하였고, 인터넷뉴스서비스(포털)는 해당 기사를 매개하였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편파보도로 명예가 훼손되었고, 음성파일을 게재함에 있어 자신의 동의가 없었으며, 음성변조 처리도 하지 않아 음성권이 침해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 결과, 인터넷신문과 포털은 신청인들에게 유감을 표명하고, 인터넷신문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며, 포털은 매개한 기사의 열람·검색을 차단하는 것으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sup>28</sup>

## 3. 잘못된 보도의 종류

- 거짓을 사실인 것처럼 꾸민 허위보도
- 한 쪽의 주장만을 전달한 편파보도
- 전체 사실 중 일부분만을 부각하여 나쁜 인상을 심어준 왜곡·과장보도
-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사진을 보도하여 피해를 준 경우
- 필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글을 수정하여 필자의 의도와 다르게 표현된 보도
- 인명이나 지명, 통계수치 등을 잘못 기록한 보도
- 범죄 혐의자나 범인으로 보도되었으나 수사 결과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 승낙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개인의 초상, 음성, 사생활, 성명을 보도한 경우



<sup>28</sup> 2018서울조정1800, 2018서울조정1801 각 손해배상청구



## 4. 청구권의 종류

중재위에 조정·중재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로는 손해배상청구권, 정정보도청구권, 반론보도청구권, 추후보도청구권이 있습니다. 위 청구들을 병합하여 신청할 수도 있고(예. 정정보도청구+손해배상청구), 조정절차 중에 청구명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 가. 손해배상청구

#### (1) 의의

언론보도로 인하여 인격권을 침해당한 피해자가 언론사 등을 상대로 금전적인 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언론중재법 제30조는 “언론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 침해 그 밖에 정신적 고통을 받은 자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언론사 등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의 성격이 강합니다. 순전히 언론보도로 인해 재산상 손실을 입었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 (2) 신청인

언론사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 침해 그 밖에 정신적 고통을 받은 피해자입니다. 이 때 피해자는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 (3) 피신청인

언론중재법상의 손해배상청구 상대방은 ‘언론사와 인터넷 뉴스서비스(인터넷 포털), 인터넷 멀티미디어방송(IPTV) 사업자입니다. 따라서 취재기자나 편집인, 정보제공자나 취재원, 투고·기고자 등은 언론중재법상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sup>29</sup>

#### 사례

한 언론사가 성탄절 연휴를 맞아 관광객이 인파로 북적인다는 방송을 하면서, 휴가를 즐기는 신청인들의 모습을 촬영하여 보도하였다. 그러나 신청인들은 촬영 당시 거부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혔음에도 촬영 및 보도되어서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 결과, 초상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과 기사열람·검색 차단을 하는 것으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sup>30</sup>

<sup>29</sup> 언론중재법이 아닌 민법에 근거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면 취재기자, 편집인 등을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sup>30</sup> 2018강원조정3, 2018강원조정4 각 손해배상청구

#### (4) 행사 요건

가해행위(피해자의 명예 등 인격권을 침해한 언론보도가 있을 것), 위법성(위법성 조각사유가 없을 것), 언론 등의 고의·과실(취재 기자 등의 고의나 과실이 있을 것), 손해의 발생(언론보도로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것), 위법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언론보도와 피해 발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존재할 것)가 있어야 합니다.

#### (5) 위법성 조각(소멸)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언론보도는 원칙적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피신청인 측에서 보도를 해야만 하는 특별한 사유, 즉 ‘공공의 이익을 위한 진실한 보도’이거나, 보도가 진실하지 않더라도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설령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되어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나. 정정보도청구

#### (1) 의의

정정보도청구는 언론보도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진실하지 않은 경우, 이를 진실에 부합되게 바로잡아 달라고 요구하는 권리(언론중재법 제14조)입니다. 언론중재법상의 정정보도청구권은 언론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나 위법성을 요하지 않습니다(언론중재법 제14조 제2항). 따라서 손해배상청구와 달리 언론의 과실이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보도가 진실하지 않으면 정정보도를 해야 합니다.

#### (2) 청구권자 - 피해자

정정보도청구권의 주체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이 진실하지 않음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입니다. 보도로 인한 피해자라면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도 당해 업무에 대하여 그 기관 또는 단체를 대표하여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없는 기관 또는 단체라도 하나의 생활단위를 구성하고 보도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대표자가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연인, 법인뿐만 아니라 민사소송법상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만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나 조합, 재단 등은 물론 민사소송법상으로는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도 사회생활상 하나의 단위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는 경우(학교, 병원, 유치원 등)도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정정보도청구

한 언론사가 모 병원 신생아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위급 상황임에도 당직 의사인 신청인이 내내 자리를 비웠다가 사망사건이 일어나기 4시간 전에서야 나타났다고 보도했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 정정보도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이에 피신청인 언론사가 아래 정정보도문을 보도했다.

## 《[정정보도] 신생아 사망 사건 당직의사 관련 보도》

본 방송은 지난 ○월 ○일 ○프로그램 「신생아 숨진 날, 하루 종일 자리 비운 당직 의사」 제하의 보도에서 "A병원 담당 의사인 B씨가 사건 당일 응급 상황에도 불구하고 오후 5시까지 자리를 비우고, '전화 처방'만 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당직 의사 B씨는 사건 당일 출근하여 오전과 오후 사망한 환자들을 회진하고 진료하였습니다. 따라서 B씨가 하루 종일 자리를 비운 것이 아님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sup>31</sup>

## (3) 청구의 대상 - 사실적 주장

정정보도청구는 언론 등에 보도 또는 매개된 '사실적 주장'에 대해서 할 수 있습니다. '사실적 주장'은 증거에 의하여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을 말합니다. 따라서 의견이나 가치판단 등에 대하여는 정정보도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비방이나 모욕, 인신공격성 발언 등에 대해서는 형사고소나 손해배상청구는 할 수 있어도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직접 취재하지 않고 통신사의 보도를 인용한 기사, 다른 언론사의 보도를 그대로 인용한 기사, 외부인사의 청탁에 의한 보도물이나 기고문, 다른 기관의 공문을 그대로 기사화한 경우라도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언론 보도가 진실하지 않다는 것은 신청인이 입증하여야 합니다.



#### (4) 정정보도청구 거부사유

(가)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

‘정당한 이익’이란, 신청인에게 정정보도의 실질적 이익이나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원보도 중 사소한 사항에 관한 정정보도청구, 언론이 속보로 충분한 정정 또는 반론을 한 경우, 관련 없는 제3자가 청구를 한 경우 등은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봅니다.

(나)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때

(다)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위법한 내용인 때: 타인에 대한 비방이나 명예훼손, 기타 형사상 범죄를 구성하는 내용인 경우

(라) 정정보도청구가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때

(마)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개회의와 법원의 공개재판 절차의 사실 보도에 관한 것인 때

#### 다. 반론보도청구

##### (1) 의의

반론보도청구권은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가 그 보도내용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반론 또는 반박 문 형태로 보도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언론중재법 제16조)입니다. 언론중재법상 반론보도 청구는 언론사 등의 고의·과실이나 위법함을 요하지 않으며,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를 불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언론중재법 제16조 제2항)

##### (2) 청구권자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보도 등의 직접적인 당사자는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외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 범위, 청구의 대상, 반론보도청구 거부 사유에 대한 것은 정정보도청구권에 대한 설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반론보도청구

모 방송사는 신청인 대학에 총장의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혼란이 지속되고 있으며, 교육부 대학기본역량 진단에서 낙제점을 받는 등 재정적 압박이 높은 상황이라고 보도하였다. 이에 대해 신청인 대학은 총장 임명에 대한 내부 절차를 밟고 있으며, 재정적 문제가 발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조정 결과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아래 반론보도문을 보도했다.

## 〈A대학교 관련 반론보도〉

본 방송은 ○년 ○월 ○일 「A대 총장 공백 장기화... '인적쇄신' 요구 거세」라는 제목으로 A대학교의 인적 쇄신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총장 공백사태가 장기화할 조짐이 있고 올 초 부과된 이행강제금 부담 때문에 재정적 압박이 높은 상황이며 교육부의 대학기본역량 진단에서는 낙제점을 받아 정원 감축 등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A대학교는 총장 및 부총장 임명에 대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고, 부총장은 임기 만료 후 초빙교수로 재계약해 정상 출근하는 것이며, 학교의 법인전입금 규모와 비율은 매년 우리 지역 4년제 대학 중 1위를 차지하는 만큼 재정에 문제가 없고, 학내에서 인적 쇄신 요구에 관한 문제가 발생한 바 없으며 해당 보도 당시 교육부의 대학기본역량 진단 평가에 대한 최종 결과는 발표되지 않았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sup>32</sup>

## 라. 추후보도청구

## (1) 의의

추후보도청구권이란 언론 등에 의하여 범죄 혐의가 있다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 또는 공표된 자가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때, 이 사실에 관한 추후보도의 게재를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 (2) 요건

추후보도청구권은 범죄 혐의가 있다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 또는 공표된 자로서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사람이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범죄 혐의'는 형법 등이 규정하는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의미하고, '형사상의 조치'는 범죄 혐의로 인해 수사가 개시되거나 구속된 경우, 기소되어 재판을 받은 경우 등 일체의 수사 및 형사소송절차가 진행됨을 뜻합니다.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경우'는 법원의 무죄판결, 검사의 무혐의처분 등을 의미하며, 법원의 공소기각, 면소 등과 검사의 기소중지, 공소권 없음 등의 결정으로 종결된 경우에는 추후보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sup>32</sup> 2018충북조정62, 2018충북조정63 각 정정보도청구



## 추후보도청구

경찰이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특정인을 협박, 돈을 갈취했다는 보도에 대해 해당 경찰관은 검찰 조사결과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면 추후보도를 청구했다. 심리결과 방송사가 신청인의 무혐의 사실을 추후보도했다.

## 〈'경찰이 조직폭력배 동원...협박해 돈 갈취' 관련 추후보도〉

본 방송은 지난 ○년 ○월 ○일자 ○프로그램「경찰이 조직폭력배 동원...협박해 돈 갈취」제하의 보도에서 “서울 ○○경찰서 교통조사계 ▢모 경위가 조폭을 동원하여 특정인을 협박, 돈을 갈취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조사 결과, ▢모 경위는 위 내용과 관련 ○년 ○월 ○일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sup>33</sup>

## (3) 행사방법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때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따라서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선고일을 기준으로, ‘무혐의처분 등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불기소처분 통지서가 본인에게 송달된 때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청구하면 됩니다.



## 5. 신청기간

조정·중재의 신청은 대상 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보도가 있은 후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단, 추후보도 청구는 형사 절차가 무죄 또는 무혐의로 종결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언론사 등에 먼저 청구를 한 때에는 언론사와의 협의가 불성립된 때(언론사 등으로부터 거절 의사를 문서로 통보받은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33 2013서울조정119·120 추후보도·손해배상청구

## 6. 신청방법

### 가. 서면에 의한 신청

신청인은 신청서<sup>34</sup>에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유와 원하는 보도문을 첨부(손해배상청구의 경우 손해배상액을 기재)하여 직접 제출 또는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된 기사본문(방송의 경우 녹음·녹화물과 녹취록, 포털사이트 및 인터넷 신문의 경우 인터넷 주소(URL))를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 시 신청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 나. 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전자신청시스템)

신청인은 위원회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전자적인 방법으로 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다. 구술에 의한 신청

신청인은 중재위 담당직원에게 조정신청 내용을 진술하여 조정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신청서 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sup>34</sup> 언론중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pac.or.kr>)에서 양식과 작성방법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 7. 조정신청 처리절차

조정신청이 접수되면 중재부는 조정기일을 정하여 신청인과 언론사 등에 출석요구서를 보냅니다.

### · 신청인 2회 불출석 시 취하 간주, 언론사 2회 불출석 시 합의 간주

출석요구서를 받고도 신청인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며, 피신청인(언론사 등)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않으면 신청취지에 따라 합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중재부는 조정 기일에 양쪽의 진술을 듣고 합의에 이르도록 적극적으로 조정을 합니다.

### · 중재부 허가 받아 대리인 출석도 가능

조정기일에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조정대리허가신청서와 위임장을 제출하여 중재부의 허가를 받아 대리인을 출석시킬 수도 있습니다. 단,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또는 소속 직원인 경우에는 대리인과 신청인의 신분관계 등을 서면으로 증명하거나 신청인이 중재부에 출석해 대리인을 선임하였음을 확인하면 허가 없이도 대리할 수 있습니다. 조정은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다만, 사건의 이해관계자는 중재부의 허가를 받아 방청할 수 있습니다.

### · 원칙적으로 14일 이내 처리, 예외적으로 최대 21일 이내 처리

조정은 접수 후 14일 이내에 원칙적으로 완료됩니다. 중재부가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릴 때에는 21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 8. 조정신청 처리결과와 효력

### 가. 조정성립

####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신청인과 언론사 사이에 합의가 되어 조정이 성립하면 언론사는 합의된 내용대로 정정·반론·추후보도문을 보도하고,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조정합의는 재판상 화해<sup>35</sup>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언론사가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신청인은 법원에 이행을 강제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가 출석요구서를 받고도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의 조정신청 취지를 수용하여 합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sup>35</sup> 소송 당사자가 법관 앞에서 화해의사를 밝히고 그 내용을 조서에 기재하면 이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 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직권조정결정)

### 직권조정결정에 동의해도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면 중재부는 당사자들의 이익과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신청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 안에서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직권조정결정은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당사자가 조정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면 그 결정은 효력이 상실되며, 자동으로 법원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원고가 되고 언론사는 피고가 됩니다.

## 다. 조정불성립결정

중재부는 당사자 간 합의가 성립되지 않는 등 조정에 적합하지 않은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정절차를 종결하고 조정불성립결정을 내립니다. 이 경우 신청인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라. 기각

신청인의 주장이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 등의 행사에 상당한 이익을 갖지 않는 경우 등 정정보도청구 등의 거부사유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 중재부는 조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 마. 각하

신청기간을 넘겨서 조정신청을 한 경우 등 조정신청이 부적법한 경우에는 각하됩니다.

## 바. 취하

신청인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조정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인이 출석요구서를 받고도 2회에 걸쳐 불출석하면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조정신청서 양식

언론조정신청서				
청구명	( <input type="checkbox"/> 정정보도 <input type="checkbox"/> 반론보도 <input type="checkbox"/> 추후보도 <input type="checkbox"/> 손해배상 ) 청구			
신청인	성명 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주소 또는 소재지		생년월일 ※단체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단체고유번호	
	전화번호		E-mail	
피신청인	성명 또는 법인명		대표자 성명 ※법인인 경우	
	주소 ※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연락처	
조정대상	매체명			
	보도일자			
	보도면 / 보도시간 ※포털사이트 및 언론사닷컴의 경우 인터넷 주소(URL)도 함께 기재 요망			
	보도가 있음을 안 날 ※추후보도청구인 경우 무죄판 결 또는 무혐의처분 사실을 안 날			
조정신청취지	※ 별 지 작 성 (정정보도청구등의 경우 청구하는 보도문 /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배상청구액)			
조정신청이유	※ 별 지 작 성			
<p>「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조정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p> <p style="text-align: center;">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귀하</p>				
구비 서류 : 조정대상 표현물의 사본 ※인쇄매체, 인터넷신문 및 뉴스통신의 경우 보도기사의 전문 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의 경우 매개기사의 전문 영상매체(TV 등)의 경우 녹화물과 녹취록 라디오의 경우 녹음과 녹취록				수수료
				없음

## 4

## 언론중재 절차

### 1. 언론중재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자와 언론사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중재위의 결정에 따라 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양 당사자 간에 합의를 이루고자 하는 조정절차와 달리, 중재는 법원의 재판과 같이 중재부의 중재결정으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중재신청을 하려면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중재부의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하고, 이런 합의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sup>36</sup>

신청인, 대상매체, 기간, 방법 등은 조정신청과 동일합니다. 중재절차는 신청인이 중재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개시되며, 중재신청은 조정절차 중에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정신청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sup>36</sup> 중재신청서 및 중재신청 합의서 양식은 <http://www.pac.or.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사례

한 언론사가 신청인이 동성애자임이 '강제 아웃팅'되었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고, 이에 대해 신청인은 해당 언론사와 인터뷰를 하거나 동성연애자라고 말한 적이 없음에도 왜곡된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며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피신청인 언론사는 즉시 조정대상보도의 열람·검색을 차단한 후 정정 및 유감보도 의사를 밝혔고, 조정심리 중 양 당사자가 정정 및 유감보도에 대하여 중재위의 중재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하고 중재를 신청했다. 중재부는 아래와 같은 보도문 게재를 결정하였다.

## 〈A씨 관련 정정보도문〉

본지는 지난 ○월 ○일자 ○면에서 A씨가 '강제 아웃팅' 당하였다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A씨는 한 번도 본인을 동성연애자로 밝힌 적이 없고, 관련 인터뷰를 한 바도 없으며, 해당 사건 관련 소송절차에서도 동성애와 관련한 언급이나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추측성 기사로 인해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은 A씨께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결정에 따른 것입니다.<sup>37)</sup>

## 2. 중재결정의 효력

##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중재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중재부가 중재결정을 내리면 언론사 등은 결정된 내용대로 정정·반론·추후보도문을 방송 또는 게재하거나 손해배상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언론사 등이 결정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신청인은 법원에 이행을 강제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37) 2018제주조정11·12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청구 → 2018제주중재1·2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청구

## 중재신청서 양식

<b>언론중재신청서</b>				
<b>청구명</b>	( <input type="checkbox"/> 정정보도 <input type="checkbox"/> 반론보도 <input type="checkbox"/> 추후보도 <input type="checkbox"/> 손해배상 ) <b>청 구</b>			
<b>신 청 인</b>	성명 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단체인 경우	
	주소 또는 소재지		생년월일 ※단체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단체고유번호	
	전화번호		E-mail	
<b>피 신 청 인</b>	성명 또는 법인명		대표자 성명 ※법인의 경우	
	주 소 ※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연락처	
<b>중재 대상</b>	매 체 명			
	보도일자			
	보도면 / 보도시간 ※포털사이트 및 언론사닷컴의 경우 인터넷 주소(URL)도 함께 기재 요망			
	<b>보도가 있음을 안 날</b> ※추후보도청구인 경우 무죄판결 또는 무혐의처분 사실을 안 날			
<b>중재신청취지</b>	※ 별지 작성 ( 정정보도청구등의 경우 청구하는 보도문 /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배상청구액 )			
<b>중재신청이유</b>	※ 별지 작성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중재를 신청합니다.				
<p style="text-align: center;">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b>신 청 인 :</b> _____ (<b>(서명 또는 인)</b>)</p> <p style="text-align: center;">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귀하</p>				
<b>구비 서류 :</b> 1. 당사자간 중재합의를 입증하는 서면 2. 중재대상 표현물의 사본 ※ 인쇄매체, 인터넷신문 및 뉴스통신의 경우 보도기사의 전문 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의 경우 매개기사의 전문 영상매체(TV 등)의 경우 녹화물과 녹취록 라디오의 경우 녹음과 녹취록				<b>수수료</b>
				<b>없음</b>

## 중재신청합의서 양식

### 중 재 신 청 합 의 서

신 청 인 주식회사 에이비씨  
대표이사 홍 길 동

피신청인 주식회사 ○○일보  
대표이사 김 신 문

위 당사자는 20 . . . 자 ○○일보 □□면 “에이비씨 제품 문제 있다” 제하의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의 분쟁에 관하여 언론중재위원회의 종국적 결정을 따르기로 합의하였기에 이 서면을 제출합니다.

20 . . . .

신 청 인 주식회사 에이비씨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3  
대표이사 홍길동 (서명 또는 인)

피신청인 주식회사 ○○일보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대표이사 김신문 (인)

언론중재위원회 귀중

## 5

## 기타 피해구제방법

### 1. 민사소송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 발생 시 손해배상청구, 정정보도청구, 반론보도청구, 추후보도청구 등에 대하여 중재위의 조정·중재를 거치지 않고 바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2. 금지청구

명예 및 기타 인격권 침해가 우려될 때, 사전에 이를 예방하는 청구권으로 방영금지가처분, 출판물배포금지가처분, 광고금지청구 등이 있습니다. 이런 금지청구권은 피해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가처분절차에 따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가처분에 의한 경우에는 본안 소송의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만 출판 또는 방영이 금지됩니다. 신문이나 잡지에 대한 일반적인 사전금지청구는 신문이나 잡지가 출판, 배포된 후 그 내용을 알게 된 피해자가 추가 발행 및 배포를 금지시키는 것인데 반하여, 방송에 대한 방영금지가처분은 그 내용이 방송되기 전에 가처분절차에 의하여 방송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 3. 방해배제청구

금지청구와 유사한 권리로 인격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이 있습니다. 인격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이란, 인격권을 침해받은 자가 그 침해상태를 야기하거나 관리하는 자에게 제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독일이나 영국 등에서 이미 권리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대법원에서도 방해배제의 일환으로서 온라인에서의 기사삭제청구를 인용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60950 판결).

방해배제청구의 구체적인 형태는 매우 다양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의 인격권 침해적 기사의 삭제는 물론이고 모욕적 댓글의 삭제, 침해행위에 제공되거나 침해행위로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 등도 방해배제의 일환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4. 형사적 피해구제

### 가. 명예훼손죄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처벌을 받습니다.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경우라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고, 허위인 경우에는 가중 처벌됩니다(형법 제307조).

#### (1) 공연성

‘공연히’라는 것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특정인에게만 전파한 경우에도 그 사람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2) 사실의 적시

‘사실의 적시’란 당사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을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적시 유무에 따라 명예훼손죄와 모욕죄가 구분됩니다. ‘모욕’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에 대하여 경멸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나쁜 놈’, ‘죽일 놈’ 이라고 하는 경우처럼 사람의 인격을 경멸하는 표현을 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민사상의 명예훼손책임은 고의뿐 아니라 과실에 의한 것일 때도 성립되지만, 형사상 명예훼손죄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을 적시한다는 고의가 있을 때에만 성립됩니다.

#### (3) 위법성조각(소벌)

형법 제310조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도 그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실한 사실이 아니더라도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 나.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경우에는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해 일반 명예훼손의 요건과 함께 ‘비방의 목적’이 추가로 인정되어야 합니다(형법 제309조).



## 다. 모욕죄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합니다.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인격을 경멸하는 가치판단을 표시하는 것입니다(형법 제311조).

### 사례

한 힙합가수가 피해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는 내용의 합창 가사(‘개네 면상 딱 액면가가 울 엄마의 신 김치’, ‘김치녀(책임과 의무를 외면한 채 상식을 벗어난 행동이나 말을 하면서 권리 타령을 하는 한국 여성을 의미하는 표현)’ 등)를 작성·발매하거나 공연장에서 해당 노래를 부르는 등 피해자를 모욕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한 모욕행위들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sup>38</sup>

## 라. 신용훼손죄

신용훼손죄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13조).

## 마. 기타 취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

형법 제319조의 주거침입 또는 퇴거불응죄,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4조 제1항, 제3조의 도청죄 혹은 공개, 누설죄, 형법 제118조의 공무원자격사칭죄 등이 취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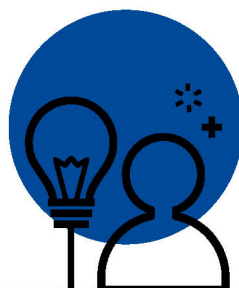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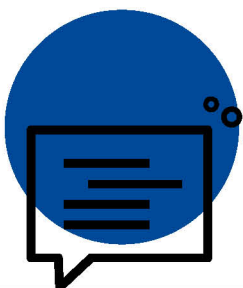


### 사례

군부대 내의 유흥업소 운영 실태를 보도하기 위해 기자가 허위 출입증으로 군부대 초소를 침입한 행위에 대해, “비록 피고인이 군부대 내의 유흥업소 운영 실태를 취재하려는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허위의 출입증으로 초병을 기망하여 군부대의 초소를 침범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의 성립요건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정당성, 긴급성과 보충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며 초소침입죄를 인정했다.<sup>39</sup>

<sup>38</sup> 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도12168 판결

<sup>39</sup>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11009 판결



## 제3장

# 언론분쟁의 예방

- 1 위법성 조각(면책)사유
- 2 공인 관련 보도
- 3 초상권 보호
- 4 사생활 보호
- 5 음성권 보호

## 1

## 위법성 조각(면책)사유

### 1. 개념

진실한 사실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알린 경우까지 명예훼손 책임을 지게 되면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가 부당하게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해당 기사가 진실한 사실을 보도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며, 진실하지 않더라도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위법성 조각사유는 그것을 주장하는 쪽이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언론보도로 인한 인격권 침해의 경우에는 언론사가 위법성 조각사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공익성	진실성	상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의 이익 또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일 것</li> <li>•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제 사실과 부합할 것</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실이 아니더라도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li> </ul>

### 2. 공익성

언론의 보도가 공공성을 갖기 위해서는 첫째, 그 내용이 공공의 이익 또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일 것, 둘째,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 공익성을 인정한 사례

- 범죄사건 보도 (단, 공인이 아닌 한 범인 또는 범죄 혐의자는 익명 처리해야 함)
- 유명 연예인이 대마초를 흡연하고 있다는 보도
- 공직자의 도덕성, 청렴성에 관한 보도, 국가기관의 직무집행이 적법하게 이루어지는지 여부에 관한 보도
- 대기업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관한 보도
-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한 원고의 배우자가 세금을 체납하였다는 보도

### 공익성을 부정한 사례

- 범죄 보도와 관련하여, 일반 국민들이 범인이나 범죄 혐의자의 신원까지 알아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범인이나 범죄 혐의자에 관한 보도가 범죄 자체에 관한 보도와 같은 공공성을 지닌다고 볼 수 없음
- 박사학위 논문조작으로 수사를 받고 있던 모 대학 교수가, 정·관계 고위층에게 성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보도하면서 알몸 사진을 게재한 행위
- 오로지 시청률을 제고하기 위해 결론을 정해놓고 그에 부합하는 것만 편집하여 보도한 행위
- 성폭력 사건을 보도하면서 피해자의 상처부위 및 상해정도를 공개한 행위
- 자사 간부의 비판에 대한 방어로써 언론기관의 지위를 이용하여 왜곡 편집한 내용을 방송한 행위



## 3. 진실성 또는 상당성

### (가) 진실성

진실성이란, 보도 내용이 실제 사실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말합니다. 공익성을 갖춘 보도라 할지라도 진실하지 못한 오보라면 명예훼손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 (나) 상당성

보도 내용이 진실이 아니더라도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즉 진실을 알아내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의무와 확인 절차를 모두 거친 때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따라서 상당성이 인정되려면 진실임을 뒷받침할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상당성 판단기준을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고, 법원에서는

- 기자가 보도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 보도내용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로 뒷받침되고 있는가
- 해당 기사가 신속성을 필요로 하는 보도인가
- 취재원이 믿을만한가
- 진실 확인이 쉬운 사안인가
- 피해자에게 확인은 하였는가
- 피해의 정도는 얼마인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 상당성을 인정한 사례

제보 내용에 허위사실이 있다 할지라도 언론사가 진실성 검증을 위해 충분한 노력(계좌거래내역을 확인하고 원고와 주변인, 담당 경찰관에게 제보의 진위 여부를 파악했던 점, 혐의에 대해 단정적인 표현을 쓰지 않은 점 등)을 기울였다면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sup>40</sup>

### 상당성을 부정한 사례

원고의 성폭력 의혹에 관한 기사를 게재하면서, 신빙성이 낮은 SNS 게시물을 근거로 했을 뿐, 피해자로 기재된 여성들은 물론이고 가해 당사자로 지목된 원고와도 아무런 전화 또는 대면 인터뷰를 실시하지 아니한 점, 원고가 강하게 이의를 제기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보도를 스스로 확대 재생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보도를 함에 있어 그 적시 사실이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sup>41</sup>

## ※ 범죄보도 시 주의할 점

### 1. 익명보도 원칙 준수

### 2. 단정적 문구 사용 자제

범죄사건 보도의 경우 범죄 혐의만 받고 있는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확정판결이 난 것처럼 단정적인 보도를 하는

<sup>40</sup>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9. 선고 2017가합515522 판결

<sup>41</sup>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18. 선고 2017가합504355 판결

경우가 많습니다(예, “포르말린 섞어”, “또 대마초”, “쓰레기 단무지로 만두소 만들어”). 이런 보도는 당연히 명예훼손이 되고, 후에 무혐의로 드러났을 경우 언론사측에서 보도의 공공성과 진실(상당)성을 입증해야 면책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히 “OO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라고 객관적 사실을 중립적으로 기사화하면 명예훼손이 안된다는 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대부분의 경우, 본문에는 단순히 OO혐의로 체포되었다고 사실에 부합되게 적시했으나, 제목에는 단정적인 범행문구를 사용하여 독자나 시청자들에게 범행을 단정하는 인상을 주었다면 역시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3.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한 필요한 조사와 확인절차를 다하여야 합니다.

4. 당사자 또는 가족에게 최대한 반론의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 ※ 범죄보도 시 실명공개에 관련된 판결

##### 1. 범죄보도는 공공성 인정 - 범죄 혐의자에 대한 보도는 신중해야

“대중 매체의 범죄사건 보도는 공공성이 있는 것으로 취급할 수 있지만, 범죄 자체를 보도하기 위하여 반드시 범인이나 범죄 혐의자의 신원을 명시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고, 범인이나 범죄 혐의자에 대한 보도가 반드시 범죄 자체에 관한 보도와 같은 공공성을 가진다고 볼 수도 없을 것이다.”<sup>42</sup>

##### 2. 공적 인물인 경우 예외적으로 실명보도 허용

“다만, 보도 대상자가 공직자이거나 공직자는 아니지만 공적인 관심사에 대하여 광범위한 영향력을 보유하거나 어떤 공적인 논쟁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그 논쟁의 전면에 자발적으로 나선 자를 포괄하는 의미에서의 공적 인물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명보도가 허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sup>43</sup>

<sup>42</sup> 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17257 판결

<sup>43</sup> 서울고등법원 2009. 1. 14. 선고 2008나14093 판결

### 3. 고도의 해악성을 지닌 중대범죄 등의 경우

“① 사회적으로 고도의 해악성을 가진 중대한 범죄 ② 사회적 측면에서의 비범성이 있어 공공에 중요성을 가지거나 공익과 연관성을 갖는 경우 ③ 공적 인물로서 업무/ 활동과의 연관성 때문에 공공에 중요성을 갖게 되는 등 시사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개별 법률에 정함이 있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공의 정보에 관한 이익이 더 우월하다고 보아 피의자의 실명을 공개하여 보도하는 것도 허용될 수 있을 것이다”<sup>44</sup>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3.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4. 피의자가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를 할 때에는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를 할 때에는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5조(공개정보의 악용금지)

- ① 공개정보는 아동·청소년 등을 등록대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성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 ② 공개정보를 확인한 자는 공개정보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신문·잡지 등 출판물,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
  2. 공개정보의 수정 또는 삭제

<sup>44</sup> 대법원 2008. 9. 10. 선고 2007다71 판결



## 2

## 공인 관련 보도

### 1. 공인이란

공인(public person)이란 그 개념이나 범위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직자(public officer)와 공적 인물(public figure), 즉 공직자는 아니지만 공적인 관심사에 대하여 광범위한 영향력을 보유하거나 어떤 공적인 논쟁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그 논쟁의 전면에 자발적으로 나선 자를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 2.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 책임의 완화

대법원은 “공공적 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고, 특히 공직자의 도덕성, 청렴성에 대하여는 국민의 감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점에 관한 의혹의 제기는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책임을 추궁하여서는 안 된다”고 판시<sup>45</sup> 하여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에서 면책되는 범위를 넓게 인정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건에서는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이 포함되어 있으나, 공직자에 대한 풍자와 독설은 모멸적인 표현에 의한 인신공격에 해당하는 정도가 아닌



<sup>45</sup>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2다64384 판결

한 널리 허용된다”<sup>46</sup> 고 하여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보도가 정당한 언론활동 범위를 벗어나 악의적이거나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경우, 공직자 등의 수인의 범위를 넘어 명예훼손이 된다”<sup>47</sup> 고 하여 공인에 대한 보도라 하더라도 그 내용에 악의적인 요소가 있을 경우 명예훼손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 판례에서의 공인 인정 여부

#### 가. 판례에서 공인으로 인정된 경우

- 정치인(국회의원이자 ○○○의 대변인)
- 강원도의회 의원
- 지방자치단체장(군수)
- 대기업 회장
- 유명 언론인
- 영화배우 등으로 활동하는 연예인
- 야구선수(미국 메이저리그 프로야구팀 소속의 한국인 야구선수)
- 공영방송 PD
- 여대생시절 전대협 대표로 평양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참석하기 위해 밀입북하여 세간에 상당히 널리 알려져 있는 인물
- 다수의 교인이 속한 교회의 대표자
- 자동차를 제조하는 대기업의 노동조합
- 정치·이념적 의견표명으로 장기간 지속적으로 언론기관을 포함하여 사회 전체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온 사람

#### 나. 판례에서 공인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

- 미스코리아 대회에 참가한 적이 있는 사람으로, 연예인의 여자친구
- 일반인이 범죄혐의의 피의자가 된 경우
-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내 장교살해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된 부사관
- 집단소송 사건과 관련하여 언론매체에 몇 차례 인터뷰하고 기사화된 적이 있는 변호사
- 유명 기업인과 결혼할 예정인 여성

<sup>46</sup>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0. 13. 선고 2006가합71378 판결

<sup>47</sup>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다83805 판결

# 3

## 초상권 보호

### 1. 초상 사용 시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언론중재법 제5조 제2항은 “인격권 침해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한도 안에서 피해자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묵시적 동의를 받아도 가능하지만, 묵시적 동의 여부는 주장하는 쪽이 입증을 해야 합니다.

#### 사례

원고들은 연기자 A씨가 검찰에 출석할 때 동행했고, A씨가 포토라인에 서는 과정에서 함께 촬영돼 모자이크 처리 없이 방송됐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에 대해 초상권 침해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원고들이 반드시 동행해야 할 의무가 없음에도 경호를 위해 자발적으로 등장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은 채 포토라인에 선 것으로 보아 초상 촬영 및 공표에 대한 묵시적 동의를 한 것으로 보았다.<sup>48</sup>

### 2. 초상 본인의 동의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초상 본인은 단순히 공표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이용에 대한 권리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의 동의를 얻어 초상이 공표되었지만 그 이용이 동의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뿐 아니라, 설사 본인이 공표한 초상이라 하더라도 본인의 공표의도와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초상권 침해가 성립합니다.

<sup>48</sup> 서울고등법원 2017. 8. 18. 선고 2016나2088853 판결

## 사례

파신청인 언론사는 신청인에게 '주말 공원 나들이 관람객의 소감'을 묻는 인터뷰 요청을 하였고, 신청인은 이에 동의했다. 그러나 실제 방송은 '유명 역사 군락지가 관람객들의 무질서로 훼손되고 있다'는 부정적인 내용을 보도하며 신청인의 인터뷰를 인용한 것이었다. 조정 결과 동의 범위를 벗어난 해당 방송으로 인한 신청인의 초상권 침해가 인정되어, 해당 부분 영상을 삭제하고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했다.<sup>49</sup>

### 3. 예외적으로 동의 없이도 초상의 촬영·사용이 가능한 경우

#### 가. 공인의 초상

이른바 공적 인물 또는 시사적 인물은 그가 갖는 시사적인 의미와 연관되는 경우에는 적법하게 촬영할 수 있습니다. 유명인의 경우에는 그들에 대한 일반 공중의 관심을 고려할 때 그들의 초상권은 일반인에 비해 어느 정도 제한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 사례

일정한 공적 논쟁에 스스로 참여하거나 개입하여 공적 인물로 인정되는 경우는 논쟁에 자발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비판적인 보도와 논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였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원고는 그 활동과 정치·이념적 의견표명 등으로 인하여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장기간 지속적으로 각종 언론기관을 포함하여 우리 사회 전체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온 사람으로서, 일반인과 비교하여 초상권과 개인생활 등 원고 개인의 사적 영역이 공개되는 것에 대하여 수인하여야 할 범위가 상대적으로 넓은 공적 인물임이 분명하다.<sup>50</sup>

그러나 공적 인물이라고 하더라도 자신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내용의 보도와 관련하여, 더욱이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초상이 공표되는 것까지 감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공인이라 하더라도 초상영리권(publicity 권)이 있어서 광고나 상품 등에 상업적으로 초상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고 경제적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 나. 기타

현재 동의 없이도 초상사용이 가능하다고 논의되는 예로는, 한 인물이 단지 한 장면 또는 장소에서 부수적인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풍경사진이나 건물사진에 누구인지 잘 모를 정도로 부수적으로 나온 경우), 집회·행렬 또는 유사한 사건의 참가자로서 나타나는 경우(촛불시위, 야구관중석 등), 사법 및 공공질서 목적 등 공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 등입니다.

<sup>49</sup> 2018서울조정117, 2018서울조정118 각 손해배상청구

<sup>50</sup>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28. 선고 2014가단123116 판결

## 4. 공공장소에서의 집회시위 참가자의 초상권

### 가. 집회·시위 장면 촬영은 원칙적으로 초상권 침해 안돼

공공장소에서의 집회·시위는 참가자들이 자신의 의사를 널리 알리고자 하는 행위이고 보도의 자유는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공공장소에서 이루어진 집회·시위 현장에서 사진을 촬영하여 보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초상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sup>51</sup>



### 나. 집회·시위 장면 촬영이 초상권 침해가 될 수 있는 경우

다만 ① 사진에 나타난 영상이나 사진과 결부된 기사 내용이 왜곡된 사실을 전달하는 결과를 가져왔거나(부정적인 내용의 기사를 작성하면서 그 기사내용과 무관한 사람의 사진을 사용하거나, 피촬영자가 집회·시위의 주도자가 아님에도 독자나 시청자들로 하여금 그와 같은 인상을 주도록 의도적으로 편집되거나 사용되는 경우 등) ② 순간적으로 촬영된 지극히 부자연스러운 표정이나 동작의 일부를 전후 설명 없이 보여줌으로써 당사자가 의도하지 아니한 의사표현이나 동작을 한 것처럼 보이게 하여 당사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상을 갖도록 하거나 모욕을 느끼게 하는 경우는 초상권 침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 4

## 사생활 보호

### 1. 사생활 공표 시 본인의 승낙을 얻어야 합니다

사인의 경우에는 개인의 혈통, 가계, 전력, 성격, 습관, 인간관계 등은 사적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당사자의 승낙을 얻어 취재 및 보도를 해야 합니다. 공인의 경우에 있어서 그의 사회적 영역에 관한 보도는 자유로우나, 사적 영역에 대하여는 공인이라도 사생활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적 영역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본인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도 승낙의 범위를 초과하여 혹은 승낙 당시의 예상과는 다른 목적이나 방법으로 공개할 경우 이는 위법한 것으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 2. 공적 관심사의 경우에는 동의 없어도 면책

공적인 이익, 즉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의 경우에는 사적 사항을 보도해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에 관한 보도라도 진실성이나 상당성이 없는 경우에는 사생활의 비밀 침해가 됩니다.

#### 사례

공적인 인사에게도 포기할 수 없는 사생활 영역이 존재하는 것인 바, 가족관계와 같은 영역에 있어서는 공인의 경우 일정한 경우에 공개가 가능하나 남녀 간의 성적 교섭과 같은 인간 자유의 최종적이고 불가침한 영역은 절대적으로 보호된다.<sup>52</sup>

<sup>52</sup> 서울고등법원 2013. 1. 25. 선고 2012나453224 판결

## 5

## 음성권 보호

## 1. 음성 공표 시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를 받지 않고 타인의 음성을 비밀 녹음하거나, 타인의 음성을 동의 없이 매스미디어를 통해 내보내면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언론보도에 음성을 내보낼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동의 이외에도 공적인 관심사에 대하여 중대한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이루어진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 2.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문제 (형사처벌의 문제)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면 처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 대화 당사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할 때 그 중 한 당사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예컨대 기자가 대화 당사자 일방만의 동의를 얻어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위법하게 녹음·작성된 자료의 경우 언론사가 해당 자료의 생산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공개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언론중재위원회 위치 및 연락처 안내

서울 사무처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빌딩 15층
	전화	02) 397-3114 ※상담전화: 02) 397-3000, 3010, 3100, 3110
	FAX	02) 397-3089
부산 중재부	주소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739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빌딩 6층 (우) 48223
	전화	051) 759-7083~4
	FAX	051) 759-7093
대구 중재부	주소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89 대구무역회관1402호 (우) 41256
	전화	053) 763-0020~1
	FAX	053) 763-0242
광주 중재부	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110 우체국보험회관 5층 (우) 61947
	전화	062) 676-0360~1
	FAX	062) 676-0362
대전 중재부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161 대전MBC 8층 (우) 34125
	전화	042) 525-0778~9
	FAX	042) 525-0768
경기 중재부	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78 경기문화재단 8층 (우) 16488
	전화	031) 211-9027, 9022
	FAX	031) 212-0223
강원 중재부	주소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6 무림빌딩 8층 (우) 24270
	전화	033) 255-2878~9
	FAX	033) 255-2872
충북 중재부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64 엔젤변호사빌딩 404호 (우) 28625
	전화	043) 286-8083, 8081
	FAX	043) 286-8084
전북 중재부	주소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76(효자동3가) 405호 (우) 54969
	전화	063) 288-0010, 0981
	FAX	063) 288-0980
경남 중재부	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95번길 5 보고빌딩 601호 (우) 51457
	전화	055) 263-1787, 1780
	FAX	055) 263-1769
제주 중재부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복5길 6 현곡빌딩 4층 (우) 63223
	전화	064) 722-3328, 3352
	FAX	064) 726-3201







## 언론중재아카데미 안내

언론중재아카데미에서는 언론피해구제 및 예방교육과 전문연수 프로그램,  
청소년 언론중재스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의 및 신청: 교육팀 (02) 397-3062~7

### 언론피해구제 및 예방교육

- 교육대상: 언론사, 대학, 기업, 지자체, 공공기관, 일반 단체 등
- 교육내용: 보도로 인한 인격권 침해 사례, 언론분쟁 해결방안, 언론조정·중재 절차 소개 등
- 교육시간: 2시간(1~3시간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 교육장소: 해당 기관의 강의실, 회의실 또는 위원회 강의실 등

### 전문연수 프로그램

- 교육대상: 공무원, 기업 임직원, 언론인, 예비 법조인, 일반인, 대학생 등
- 교육내용: 대상별 분쟁해결 전략 및 언론대응 역량강화, 언론조정·중재 절차 소개 등
- 교육기간: 1~10일(과정별로 상이)
- 교육장소: 위원회 강의실(서울, 부산, 광주) 등

### 청소년 언론중재스쿨

- 교육대상: 초·중·고 학생
- 교육내용: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에 대한 이해 및 진로 탐색
- 교육시간: 2~3시간
- 교육장소: 위원회 강의실(서울, 부산, 광주) 등

\* 언론중재아카데미 교육 프로그램은 원칙적으로 무료로 진행되며,  
자세한 프로그램 및 교육 내용, 신청방법 등은 언론중재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pac.or.kr>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04520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빌딩 15층 대표전화 (02) 397-3114 홈페이지 <http://www.pac.or.kr>

이 책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것입니다.  
저작권법에 따라 본지에 수록된 글의 무단 복제와 전재 및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